



달동네의 성탄 꼬마천사들

광주 번성교회 초등부 학생들이 24일 밤 광주시 서구 양동 통샘마을에서 촛불을 들고 캐럴을 부르며 온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상반기도 예산 조기집행 광주·전남 3조7천억 푼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각각 1조3천억원과 2조4천억원 가량을 조기 집행한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예산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요구, 광주시는 내년 예산 2조8천530억원 가운데 1조2천778억원, 전남도는 3조7천900억원 중 2조3천800억을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2010 광주·전남 예산 조기집행 주요사업

사업명	예산 (억원)
■광주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	250
광주-화순 도로 확장	100
영산강 대상 근린공원 조성	559
재래시장 활성화	65
■전남	
전주-광양 고속도로 개설	3,786
여수-순천 전라선 철도개량	1,000
압해-임태 새천년 대교 건설	160
여수-순천 국도 17호선 확포장	500

특히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수~순천 간 전라선 철도개량사업 1천억 원 등 여수 주변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등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 2만5천개 창출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도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급과 의회 관련 비용,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 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출 균등한 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예산 조기 집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예산 조기집행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조기 통과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시·도의 조기집행 대상 예산은 주로 재래시장 활성화, 공공근로 등 사회복지,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대형 사업들이다.

광주시 주요 사업은 CGI(컴퓨터형성 이미지) 센터 건립(110억),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건설(250억원), 광주-화순 도로확장(100억원),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조성(559억원) 등이다.

사회복지·경제 살리기 부문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65억원), 희망근로사업(198억원), 광산업 3단계(62억원), 국립광주과학관 건립(45억원), 세계김치연구소 건립(50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3천786억 원 등 SOC 분야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비 6.9% 증가한 1조3천666억 원의 재정이 SOC 사업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4명 중 3명 “소득분배 불공평”

호남지방통계청 ‘2009 광주·전남 사회조사’

직업 선택 최우선 기준은 ‘돈’

광주·전남 지역주민 4분의 3이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절반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또 지역민의 2/3가 앞으로의 소득이 현재와 같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만 15세 이상 가구원 1천8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9 광주·전남 사회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조사대상자의 11.5%와 13.9%가 각각 자신의 소득에 만족, 43.5%와 39.8%는 보통, 45%와 46.3%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또 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75.6%,

73.1%가 불공평하다고 밝혀 상당수의 지역민이 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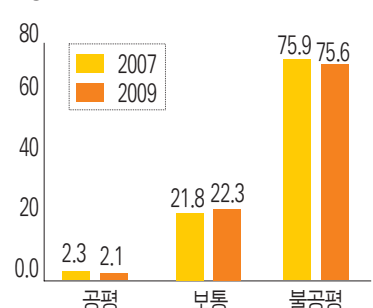
소득 분배에 대한 불공평 정도는 전국 평균인 70.1%보다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소득에 대한 만족 비율에서도 광주·전남은 전국 평균인 14.1%보다 낮았다.

‘1999년 조사’에서는 소득에 대한 만족 비율이 광주·전남 각각 10.5%, 11.5%, 불만족 비율이 45.7%, 49.8%였다는 점에서 10년 전보다 소득 만족 비율은 늘고, 불만족 비율에 있어서는 두 곳 모두 소폭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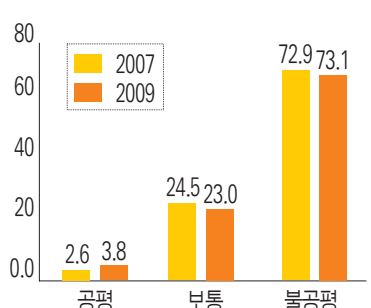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광주·전남조사대상자 중 각각 36.5%와 30.4%는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40.3%와 36.

■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 (단위 %)

■광주



■전남



2%는 동일, 23.3%와 33.4%는 오히려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조사’에서는 장래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43.2%와 32.4%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도민들은 2년 전보다 앞으로의 경제여건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생활’에 대해서는 각각 9.4%, 12.9%만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국 평균인 13.7%를 밑돌았다.

올해 조사와 ‘1998년 사회조사’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이

직업선택요인이었다. 올해 조사대상자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밝힌 것은 광주·전남 모두 ‘수입’으로 35.7%, 34.2%를 보였으며, 다음이 ‘안정성’(34.2%, 33.8%)이었다. 그러나 11년 전에는 ‘안정성’이 41.8%와 45.8%로 가장 높았으며, 수입은 각각 16.9%와 22%에 불과했다. 이 같은 통계는 지역민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미래 발전성보다는 현재의 수입을 중시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

이대통령 “준예산 집행 준비하라”

예산안 처리 지연 대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에 대해 지참대로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중소 채용 예정자 14만명 맞춤형 훈련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려고 청년 취업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소기업 채용 예정자 14만명을 상대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청년층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시키고자 연간 80만건에 달하는 청년구직자 정보(DB)와 6만곳의 중소기업 정보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를 꺼리는 사

회 분위기를 타파하려고 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범 정부 차원의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태스크포스(TF)인 청년고용대책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불일치) 해소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청년과 고령층을 지원하는데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 국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도 다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친바람이 불면
아이스크림의 상으로 사랑 받으세요.

innisfree